

의안 번호	2193	<p>【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p> <p>심사보고서</p>
----------	------	--

1. 심사경과

- 제출 일자: 2023. 11. 9.(목)
- 제출 자: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2023. 11. 9.(목)
- 위원회 심사일자: 2023. 12. 6.(수)

2. 제안설명 요지 (안전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22건(도로 16, 주차장 3, 어린이공원 외 2)
- 단계별 집행계획
 - 1단계(3년 이내 시행): 2건(어린이공원, 체육시설)
 - 2단계(3년 이후 시행): 20건(도로 16, 주차장 3, 공공공지 1)

다.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정식)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을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시설을 2단계로 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함.
- 이상과 같이, 본 의견청취 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에 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건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청취완료

근 거 법 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7. 12. 2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 2. 6.]